

민주 '머나 먼' 공천개혁

개혁특위 제시案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 세차례 합의 실패... '누더기案' 전략 우려

민주당의 공천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개혁특위가 제시한 개혁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다 이마저도 내부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개혁특위의 최종안이 만들어진다 해도 최고위, 당무위 등의 의결 과정에서 내용 수정이 거듭되면서 '누더기 개혁안'으로 전략할 우려도 크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4일 민주당 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개혁에 대한 최종안 도출에 나섰으나 이견을 극복하지 못했다.

개혁특위는 오는 1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 도출에 나서기로 했지만 그동안 세 차례나 합의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 개혁안은 100% 완전국민경선제와 여기에 배심원제(슈퍼스타 K)를

가미하는 방안 등 두 가지다.

하지만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공천 개혁안은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최소화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아 정당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완전국민경선제는 동원 경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특위가 흥행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배심원제(슈퍼스타 K) 방식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듯이 각종 논란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개혁특위의 공천 방안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의결 과정에서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

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호남 국회의원 그룹과 중도성향 국회의원 그룹, 진보성향 국회의원 그룹 등과 의견을 나누는 결과, 개혁특위의 제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으며, 전남 모 국회의원은 "개혁특위안은 의결 과정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혁특위가 완전국민경선제나 이를 근간으로 배심원제를 가미한 방안을 공천 개혁안으로 최고위에 제출한다 해도 내용 수정이 거듭되면서 '누더기 개혁안'으로 전략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개혁안 수정 과정에서 오히려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 유리한 경선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민주당 공천 개혁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데다 당내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제한하는 진정성 있는 공천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차기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모녀의 일자리 찾기 7일 광주시 북구 침산단지에서 열린 '2011 북구 찾아가는 취업박람회'에 아이를 업은 한 여성 구직자가 구인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오리엔텍 등 11개 업체가 참여한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2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는 아파트 도시 거주비율 63% 전국 최고 전남 '1인 가구' 1위 10집중 3집은 한명만 살아

2010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광주시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63.5%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단독주택 비중이 5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대조를 보였고, 고령화에 따른 1인 가구도 10가구 중 3가구에 육박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 아파트 거주 전국 최고=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0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아파트가 지난해 처음으로 거주 유형에서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파트 거주 가구 수는 816만9000가구로, 2005년 662만9000가구에서 154만 가구 늘어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1.7%에서 47.1%로 5.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광주는 2위 울산(54.9%)보다 10%포인트 가량 더 높은 63.5%로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았다.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도 광주였다. 대전(70.3%), 울산(70.2%)을 제치고 76.5%를 기록했다.

또 광주는 주택 증가율에 있어서도 경기(17.6%)에 이어 17%로 전국 2위였다. 반면 전남은 주택 증가율 2.9%로 전국 최하위였고, 단독주택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9.2%를 기록했다. 단독주택 거주비율 역시 광주와 정반대로 59.9%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빈집 비율은 강원(9.7%)과 충남(8.4%)에 이어 8.2%로 세 번째로 높았다.

◇전남 1인 가구 전국 최고= 1990년 이후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 가구였지만 2010년에는 2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었다. 총 가구에서 4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31.7%, 2000년 31.1% 2005년 27.0%를 차지해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5%로 비중이 확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2인 가구 비율은 24.3%로, 1인(23.9%), 3인(21.3%), 4인(22.5%), 5인 이상(8.1%)보다 높아 두 명이 사는 집이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가구의 비중이 커진 가운데 7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수도 크게 늘었다. 전남의 1인 가구 비율이 28.9%로 가장 높고 경북(28.8%), 강원(27.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19.2%가 가장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2005년 54만 8000가구에서 지난해 79만3000가구로 44.7% 늘어나 전체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3%에서 19.2%로 확대됐다.

또 지난 5년간 시·도별 가구증가율은 광주 12.4%로 경기(16.3%), 충남(14.3%)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전남은 2.5%로 전국 최하위였다.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전남 집구입 부담 7년만에 최고 기록

전남의 지난 3월말 기준 주택 구입 부담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 금융주택공사에 따르면 전남의 주택구입능력지수(K-HAI)는 지난 3월 말 현재 29.0으로 지난해 말보다 0.7% 상승했다. 이는 2004년 금융주택공사 주택구입능력지수를 도입한 이래 최고 수준이다.

주택구입능력지수는 수치가 하락할수록 도시 근로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줄었다는 것을 뜻한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면 도시 근로자가 주택 가격의 절반을 대출해 주택을 샀을 때 대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득의 25% 미만이라는 의미다.

전남의 주택구입능력지수는 전국 최저 수준이지만 목포지역 아파트값이 강세를 띠면서 수치를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의 주택구입능력지수도 지난해 말 36.6에서 38.5로 상승했다. 국민은행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지난해 말에 비해 광주지역 아파트값은 8.4%나 상승했다. 이는 재건축을 앞둔 서구 화정 주공아파트와 내년 이주를 앞둔 영주 주공아파트 때문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exian@kwangju.co.kr

“경찰 1차 수사, 검찰 보충 수사기관돼야”

조현오 경찰청장 광주서 치안현장 간담회

조현오 경찰청장은 7일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일차적으로 주된 수사기관이 되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기관이 되는 즉 일분식 수사 구조로 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광주시 북구 매곡동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직원들과 가진 치안현장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에 벌어진 후일담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수사권은 검찰과 싸워

서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며 수사권은 국민에게 제대로 된 경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에게서 인정받아 얻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특히 “지난달 20일 청와대 8인 회의에는 최악의 안(案)이 올라 있었다. 검찰은 지금의 일원화된 수사 구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했다”며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면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독자적 수사 주체성을 반드시 받아내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앉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6개월 내 대통령령이 마련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www.hpdynastycc.co.kr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축하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다이너스티CC

친환경 나비고장 함평에 오시면
사계절 푸른 양잔디, 한복의 수채화 같은 함평 다이너스티가 여러분의 삶에 여유로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겠습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 1-6
예약전화: 061-320-7700·7777